

# 일본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제정 박차

글\_ 백원근(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 4월 11일 열린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안 심포지엄' 장면  
(사진 = 일본 〈文化通信〉 제공)

## ‘출판+독서 진흥법’ 제정 서두르는 일본 국회

일본 국회의 초당파 국회의원 286명으로 구성된 ‘활자문화 의원연맹’은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총회에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젊은 세대의 활자이탈 현상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문자·활자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적인 국민생활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달 말 상정을 거쳐 조만간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골자안의 기본 이념은 ①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이나 신체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풍요로운 문자·활자문화의 혜택을 평등하게 향수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②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읽기·쓰기·조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무를 갖도록 하여 교육방법의 개선 및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강구, 지역사회의 문자·활자문화 진흥, 출판활동의 지원,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시행할 책무가 있다. 지자체는 정부와 연계하는 한편, 지역 실태를 감안해 문자·활자문화 추진 시책을 책정·실시할 책무가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공공도서관이 주민에게 널리 이용되는 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정부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출판물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등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크게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나아가 의원연맹은 정치·행정·민간의 연계 추진을 위해 동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책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문자·활자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북스타트’의 보급에 의한 육아 지원, 책 읽어주기 사업의 지원, 독서 어드바이저의 육성,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 등 10개 항목을 적시했다.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충실한 독서지도, ‘독서시간’ 확보를 통한 언어능력 향상 교육의 지원,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도서관과’ 및 ‘독서과’ 도입, 특수학교의 독서환경 정비, 신문을 이용한 교육활동NIE 등의 11개 항목을 시책으로 제시했다. 출판활동과 관련해서는 문자·활자문화의 발전을 위한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도서정가제의 유지,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의 진흥 및 보급, 출판자의 고유 권리인 판권(著作権)의 도입, 번역 기회가 적은 외국 저작물의 번역 및 일본어 저작물의

● **이 글을 쓴 백원근**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에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



법안 요지 전문이 실린 히다미요코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1.ocn.ne.jp/~miyoko/menu02-62.htm>

번역 지원과 번역자 양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도서전 등 국제 문화교류 지원의 5개 항목이 제시됐다.

한편, 도서정가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엔터테인먼트 의원연맹이 음악용 CD 등을 제외한 신문·도서·잡지 3개 품목 한정적 독점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 의원연맹도 활자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정하고 있어 양 의원연맹간 공동연대도 모색되고 있다.

활자문화 의원연맹은 4월 11일 일본국회 인근의 헌정기념관에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동 법안의 요지와 시책을 공표하면서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사회적 이해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법안 취지 설명에 나선 의원연맹 간사 가와무라 다테오 河村建夫 중의원(전 문부과학성 대신)은 "말을 배우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잡지·신문 등의 문자·활자와 만나는 것이다. 누구나 이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출판물의 출판이 곤란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원연맹은 이 법안에 기초한 시책의 입안과 시행을 철저히 지켜보며 재정적 뒷받침을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출판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대여권, 판면권 문제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저작권법 개정에서 남겨진 중요한 과제로, 이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원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히다미요코 肥田美代子 중의원 의원은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이라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100년 앞을 바라보며 읽기 쓰기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이 필요하다. 동법은 이를 정관민政官民 협력으로 확실히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출판물·신문 등 활자문화는 필수적인 영양제”, 이를 위한 생산·유통·이용 촉진**

2000년 '어린이 독서의 해' 및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제정에 앞장선 바 있는 히다미요코 의원은 최근 <출판뉴스>2005.5.상순호에 기고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과 읽기쓰기 활동을 생각한다"라는 글에서, 어린이일본에서는 만 18세까지를 위한 독서환경 정비는 모든 어른들을 위한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동법에 있다고 강조한다. 어른들이 책을 읽는 가정에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력과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독서는

선택적 기호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중요한 이념으로 삼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가히 '독서입국 일본의 전도사'라 할 만한 발언이다. 히다미요코 의원은 50권 이상의 책을 펴낸 동화작가이자 약사 출신답게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영양제인 활자문화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활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도서, 잡지, 신문"이므로, 이의 생산·유통·이용(도서관·학교교육 등)을 촉진하자는 지식 인프라 산업의 진흥이 또 하나의 핵심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제 제정에는 학력저하 및 OECD의 2003년 학습도달지수조사에서 14위로 하락한 학생들의 독해력 저하에 따른 국제 경쟁력 문제의 사회적 환기, 요미우리신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21세기 활자문화 프로젝트' 등 신문·출판계의 자구적 활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서정가제 유지 조항의 법안 포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큰 반론 없이 6월 이내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식으로 본다면 동법은 출판진흥법과 독서진흥법을 종합한 측면이 강하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현재 개정 논란이 거센 출판진흥법, 그리고 도서관법 개정 추진에 따라 시민단체인 '책읽는 사회'를 중심으로 독서진흥법의 독립 법제 제정이 추동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타산지식의 자극이 되고 있다. 일본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주목**